

● **교육인적자원 대통령 업무보고, 고등교육 과제 15개, 분야별 추진계획 발표**

교육인적자원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은 교육 경쟁력 확보와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괄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에는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와 구조조정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6개와 분권과 자율을 담은 지방대 육성방안 등 3개 과제, 사회안전망과 교육 복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 보장 과제 4개 등 모두 13대 과제가 망라됐으며, 3대 혁신과제도 제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히 13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33개의 세부 사항을 담은 참고자료를 통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예시했다.

올해 교육 정책의 로드맵 성격을 담은 이번 보고는 그간 추진된 정책이 망라됐다는 점에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부 고등교육 사안은 일정이 구체화되거나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것들이어서 주목된다. 고등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과제를 종합, 전망한다.

• **사립대 인수 합병과 국립대 체제 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경쟁 환경 가속화로 대학법인의 경영 부실과 도산 우려가 증폭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인수·합병 및 해산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사립대와 법인에 대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한

계법인에 대해서는 단계별 종합 대책을 통해 해산 또는 인수 합병에 따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 개정 안도 올 하반기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는 오는 2008년까지 정원 감축 노력을 기울이되 연합체제 구축을 통한 특성화 분야 중심 육성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 교육대와 인접 사범대간 통폐합이 유도되며, 구조조정과 통합 배분 등의 자문을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대학 구조조정 위원회'도 둘 계획으로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국립대 정원 감축 비율을 확정하고 통폐합 실적이 있는 대학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2005년에는 3천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 **국립대 의사결정구조 개편과 총장 선출제 개선**

총장에게 귀속된 의사결정권한을 학부모와 지역인사까지 확대, 이해관계자가 대학 운영에 참여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관계법령을 정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법

〈대학교 개혁 방향〉

사립대	국립대	
사립대 법인 퇴출 경로 마련 → 2004년 하반기 법 개정	구조조정 방향	국립대 연합, 통폐합 유도 → 2008년까지 정원 감축
자발적 해산 유도(학생·교직원 보호 재산 출연자 보호대책 마련)	구조조정 유인책	▶ 대학구조조정 위원회 설치 ▶ 구조조정 실적 평가 → 예산지원 차등
법인 이사회에 지역인사, 학부모 등 외부인사 참여 확대 유도	의사 결정 구조 개선	▶ 총장 선출방식 개선(직선제 → 대학 자율 공모·간선제 등 다양화) ▶ 대학평위원회에 외부 인사(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인사)포함 → 2004년 하반기 법 개정

정비는 국회 동기가 필요한 만큼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총장 선임 방식은 구성원간 합의에 의한 총장 공모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 직선 총장 선출시 대학 구성원의 참여 범위 확대 등 대학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 사학분쟁 조정기구 법제화와 법인 이사회 개편

지난해 7월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컸던 점을 감안, 법제화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히 사학 분쟁의 중립적,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교육계와 법률 전문가 등 각계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 조정을 거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사립대 법인 이사회도 운영권 독점이나 폐쇄적인 구성 등으로 사학 비리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의식, 올 하반기까지 지역인사와 학부모 등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해 개방성과 민주성을 높이기로 했다.

• 지방대 육성과 수도권 접경지역 대학 설립

여러차례 언급됐지만 지방대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간 1조 4천2백억 원의 예산이 집중된다. 지원방식은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한 사업단에 집중되며, 지자체-산업체-연구소간 공동 협력이 유도된다.

대학과 산업 집적지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산업단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중심 대학도 선정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전국을 전략산업 권역별로 구분, 올해부터 산업대학이나 공과대학에 4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기본계획은 3월 중 공고해 6월 중 선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접경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중 1~2개를 선정,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으로 이전하고, 소규모 4년제 대학 설립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통해 현재 인구 10만명당 0.3개에 이르는 대학 수를 0.5개로 확대하고 수도권 낙후지역의 교육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접경지역에 분포한 대학은 대진대, 포천 중문대, 중앙승가대, 한국항공대, 한북대 등 5개교이다.

• 사립대 예·결산 공개와 대학 평가 전담 기구  
사립대 예결산서와 감사보고서

등 회계정보를 통합.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일반에 서비스하는 포털사이트 프로그램을 연내 개발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요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문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평가 결과를 대학 지원정책과 연계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성에 따른 평가로 자율 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 그러나 별도의 평가 전담 기구 설립 방안은 관련 예산 등 협의 과정이 많아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으며, 당장 올해와 내년에는 한국대학교육협회의 평가 기능을 확대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평가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기업체나 수험생이 학교 선택이나 정보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고려, 평가 지표 DB 구축과 결과 공개가 점차 이뤄질 전망이다.

•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

지난해 우리나라 학생 15만9천여 명이 외국 유학 생활을 한데 반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1만2천3백여 명에 불과, 16억 달러의 심각한 무역수지 역조와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 고민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84년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 계획을 추진

한 결과 지난해 목표를 넘는 11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확보한 것도 자극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점 지역으로 정하고 국내 생활이나 수학여건 개선, 통관 절차 개선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명 정도 유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근본 대책 수립 못지 않게 예산 지원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관련 예산이 5천9백억 원인데 비해 우리는 올해 지원 예산이 3억2천만 원 책정된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 ● 교원 자격기준 강화와 주말대학 운영

교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자격 검정 기준 강화와 교육과정 개선과 차별화를 유도하며, 대학별로 차이가 나는 교육과정의 표준안을 만들어 권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원 자격 양성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특히 기본안을 올 7월까지 만들어 8월부터 우선 순위로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학 학사 지원 필요 분야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올 3월 실시하고 5월까지 대학현장지원서비스팀을 구성해 대학의 규제 완화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으며, 평생 학습사회 정착을 위해 야

간 대학이 주말 주간을 이용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 ● ‘대학설립 운영·규정’

##### 개정·시행

대학과 전문대, 대학원대학, 기능대학 등의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설립 인가 심사 때 지금까지는 양적인 요건만 강조했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위한 질적인 준비까지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내용으로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시행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교사(校舍·건물), 교지(校地·땅), 교원(敎員·교수),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항목만 심의해 이를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설립인가를 내줬지만 심의 항목에 설립목적, 학칙, 학교헌장,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등도 포함했다.

특히 사립대 설립·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학 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 등을 따질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는 설립자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고, 특히 학교법인 설립단계에

서는 대학설립을 추진하는 사람이 출연재산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어 학교법인만 설립한 뒤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었다.

개정안은 또 대학 구내에 있는 교직원, 연구생 등을 위한 아파트·공관,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의 시설을 교사시설이나 부속 시설로 인정, 연구력 향상을 위한 교직원 복지시설 조성과 산학협력 관련 시설의 구내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설립되는 대학이 주로 소규모이거나 대학원대학인 점을 감안해 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 실습공장, 학생기숙사 등의 지원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에서 ‘필요할 경우 갖출 수 있는 시설’로 바꾸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도 ‘5% 이상’에서 저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 ●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통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공계 지원에 관한 법안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법안의 의결에 따라 그동안 이공계 지원을 위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온 시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

게 됐으며, 체계적인 이공계인력 육성은 물론 평생 활용 및 지원 체제, 사회적 지위 확대 및 처우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특별법안은 이공계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재직 중에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평생 지원체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가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이공계인력의 공직진출 확대 및 정책결정·승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합시책을 추진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육성·지원, 공직진출 확대 및 처우개선, 산·학·연·관 교류 확대, 이공계진학 촉진, 대학·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공계대학의 우수한 학생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급·생활

비 용자 지원 등 장학기회 확대, 이공계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한 특별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이공계인력에 대한 재교육·재훈련 제도의 도입 및 지원, 미취업 상태의 석·박사학위 소지자 취업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이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하여 재정 또는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지역별 이공계인력 중개센터 설치 등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취업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이 특별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과기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체대 졸업생, 체육단체 인턴사원 채용

문화관광부는 “체육현장에 인턴사원을 배치, 아테네올림픽 대비총력 지원체제 구축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 2백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 대상 인원중 대한체육회는 16개 시도 학교 운동부 코치

80명과 아테네올림픽 준비요원 및 국내 개최 국제대회 운영요원 40명 등 1백20명을 채용하며,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16개 시도마다 5명씩 모두 80명을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해 생활체육 이론 강습과 실기 교육을 맡길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로 이달중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선발하며,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월 60만원의 급료를 지원한다. 문화부는 학교 운동부 코치와 생활체육지도자는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고 채용 대상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채용 방침이다.

문화부는 “이번 인턴사원제 시행으로 체육분야의 산학연계체제의 강화는 물론 청년실업 해소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대학법인 13곳, 개교도 못하고 퇴출

대학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자금난 등으로 학교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13개 부실 학교법인이 퇴출된다. 대학법인이 강제 퇴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뒤 우후죽순처럼 허가됐던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설립 허가를 받았지만 자금난을 겪거나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13개 학교법인에 대한 퇴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5개 미개교 학교법인 중 개교 가능성이 없는 13개 부실법인에 대해 지난해 2차례 소명 기회를 줬으나 소명하지 않았다”며 “이달말까지 한차례 더 소명 기회를 준 뒤 이르면 4월말 법인설립 허가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13개 학교법인 중 강북학원과 독우학원, 동육재단, 성재학원,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6개 법인은 법인 소유 재산이 없고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비인학원과 명진학원, 한산학원은 법인 소유 재산은 있지만 재산이 가압류되거나 법원에 공탁돼 있고 이사회 기능도 마비됐다.

선교학원과 애향숙학원, 경남 예술학원 3곳은 이사회는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 설립에 충분한 재산이 없으며 브니엘학원의 경우 '97년 대학원대학 설립인가를 내 줬으나 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처럼 부실 법인이 난립하게 된 것은 '96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뒤

학교 설립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법인 설립이 허가됐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일부 법인이 대학 설립계획을 이용, 교수 등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아예 짝을 잘라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수도권내 지방대 대학원 '퇴출'

입학 정원이 감소하기 시작한 1990년대 하반기부터 교육 수요자를 찾아 슬금슬금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진출했던 지방대 대학원 46곳이 8월말까지 문을 닫거나 본교로 옮겨 갈 처지에 놓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내 유일의 북한문제 전문가 양성 기관인 경남대북한대학원(서울 중구 삼청동)과 영산대 법무대학원(서울 강남구 삼성동) 등 수도권에 있는 지방대 대학원 46곳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돼 8월말까지 학습장을 폐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대학이 대학원은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대학 안에 설치토록 규정한 고등교육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일부 지방대는 건물과 교수요원 등 기본

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강의실 하나만 달랑 얻어 시간강사를 채용, 부실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일종의 학위 장사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의 경우 본교 캠퍼스가 있는 경남 마산시에 개설하는 조건으로 1998년과 2001년 석·박사과정인가를 받았으나, 서울에서 불법으로 정부나 언론기관 중사자를 대상으로 학위 과정을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충남 H대는 서울 중구 신당동 모 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석·박사 과정(정원 70명)의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 K대는 이사장 소유인 서울영등포구 K병원 안에 경영대학원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충북 S대는 경기고양시에 교육대학원을 개설했다.

이에 대해 일부 대학은 대입정원 축소와 교육시장 개방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남 H대 대학원 관계자는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 대상의 특수대학원인 만큼 수도권 인구집중과는 무관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도권에 외국 유수대학의 분교유치는 허용하면서 지방대 대학원을 문제삼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 **학교기업 설치·운영규정**

**(대통령령) 시행**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정비학과) 제빵공장(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컴퓨터회사(전산학과) 등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된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기업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기업 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전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실업고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직접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학교기업을 교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교직원 보상금이나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부동산업, 오락업 등 학교에서 운영하기에 부적절한 일부 업종은 금지된다.

학교기업을 설립하려면 소재지와 사업종목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며, 연간 학교수입 총액의 10% 범위 안에서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생산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할 경우 학점으로도 인정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학교기업 설립이 가능해지면 사립대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5월부터 '대학학사현장지원팀' 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개별 대학의 현안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을 '대학학사 현장지원 서비스팀'을 이르면 5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완화 차원을 넘어 현장 문제에 대해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학사와 대입전형 업무를 위주로 시행한 뒤 점차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설명했다.

서비스팀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기관 담당자, 고등교육 전문가, 산업체 및 대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업무는 현안 해결과 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운영, 새 학사제도 도입, 지역·산업체 연계 등의 사안에 대해 개별 대학의 요구에 따라 정책자문 및 법률 검토, 정보 제공, 유관기관 연결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단순민원, 질의, 재정지원 및 평가와 연계되는 사업, 개별대학 이익에만 부합되는 업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 **감사원, 교수연구비 유용 조사 착수**

감사원이 각 대학의 국고지원 연구비 관리실태를 전면 감사하기 위해 연구비 지급 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용 등 단서가 포착될 경우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학술진흥재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본부 감사요원 4명을 파견, 전국의 대학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국고지원 연구비(연간 2,200여 억 원)의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과 행정기관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이 대학 비리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술진흥재단 관계자는 "감사원이 전체 기금 규모와 연구비 지급실태는 물론, 최근 접수된 비리 제보 내역까지 샅샅이 수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각 대학에 지급된 연구비가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대학의 자체 관리시스템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학술진흥재단의 사후 관리는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수집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명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 사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 자료수집활동에 나선 것”이라면서 “국고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고유권한인 만큼 연구비 유용 의혹이 발견될 경우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 ● 교수 채용기준 사전 공개 의무화

교수 임용과정의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사립 대학은 교수채용 시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를 새로 뽑을 때 심사기준의 사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각계 의견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총·학장이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지원 마감 1개월 전까지 채용분야 인원 지원자격(학위소지 여부 등) 등 채용내용은 물론, 심사항목(논문 업적 공개강의 면접 등)과 항목별 배점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과별 단과대별로 제각각인 심사기준을 모두 공고할 경우 신문 광고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져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공고한 것으로 인정하되 한 번 공개한 심사기준은 공고일 이후 채용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지원마감 2개월 전까지 일간지나 관보에 채용분야 및 인원, 지원자격만 공고하면 된다.

###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발족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학사관리, 법인 운영, 교원 인사관리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법령상의 규제 뿐 아니라 과거에 내려진 지시, 지침 등도 자율화 검토 대상에 포함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자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건의하고 자율화 대상 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은 안경환 서울대 법대 학장과 배득중 연세대 교수,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강희

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장, 이병남 LG구조조정본부 부사장, 전 풍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윤혜원 연합뉴스 논설위원, 조상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문화위원장, 구기성 국회 교육위원회 행정실장 등 교육·경제·법조·언론계 인사와 시민단체 대표, 또 교육인적자원부 및 관련부처 국장급 공무원이다.

### ● 이공계 우수여학생에 정부 장학금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의 우수여학생에게 연간 500만원 가량의 정부 장학금이 지급되고 해당 대학에도 연구장려금이 지원된다. 과학기술부는 우수한 여성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담아 이달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공계 대학의 여학생 적정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여학생비율이 30% 미만인 학부의 여학생 진학촉진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공계 대학중 공과대의 경우 여학생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일단 이공계

대학의 여학생 비율목표를 30% 선으로 정해 학과, 학부별로 여학생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 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과대에 진학하는 여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장학금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이공계 여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관련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국립대 공동학위,

#### 대입개선방안 등 추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경남 거창 셋빛중학교장)가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국립대 재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장에도 학점을 이수한 국립대 총장 이름이 병기(併記)된다. 그렇게 될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립대 간 구별이 무의미해지고 서울대의 독점적 지위도 사라져, 사실상 '서울대 폐지'에 준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또 이르면 현재 중3 학생들이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

는 오는 2008학년도부터 전국단위 수능점수 없이 대학입학 전형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혁신위는 이 같은 초안을 토대로 오는 8월까지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제1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자료'(3월 19일)에 따르면, 혁신위는 국립대학 상호간 협약에 의해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모든 대학간 학생·교수·교육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공동수강·상호학점 인정 등을 유도하고, 추후 전학(轉學)의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지역간 사회적 격차 해소와 지나친 학벌주의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시험점수 없는 대입 전형 비율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수능과 같은 일률적인 시험에 따른 점수 없이,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정과 교육내용 등을 평가·기록한 '교육이력철'을 활용해 대입 전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수능 등급제 추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에 수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혁

신위는 재수생·검정고시생 등 '교육이력철 활용'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에는 전국 혹은 지역별 학력고사(가칭 교육과정 완성도 평가)라는 '점수'를 통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점수 위주 대학입시에서 초·중·고 교육을 분리해야 정상적인 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방안이 강구됐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 밖에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합격자 등에 대해 지역대학에 일정 쿼터를 배정하고,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면허 교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 수능 출제·관리

#### 개선방안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선택과목별 만점자의 표준점수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쪽으로 보완책을 검토해 왔으나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성적표의 점수를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로만 기재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표준점수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 과목별 표준점수의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또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 ▲최근 5년간 상업용



수험서 집필자(공동명의 포함) ▲ 입시학원, 인터넷 방송 출연자 등은 수능 출제위원이 될 수 없다. EBS 출연 강사도 출제위원이 될 수 없지만 검토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관리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표준점수 문제 대학에 일임

교육인적자원부는 수험생과 대학에 현행처럼 '조정되지 않은' 과목별 표준점수를 그대로 제공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신 '표준점수 문제'를 대학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일임했다. 표준점수 문제란 원점수가 같더라도 선택 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가 10여 점 이상 나는 등 실력과 관계없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서울의 일부 대학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분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과목별 최고점부터 최저점까지 서열을 따져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 고려대는 선택과목의 백분위로 표준점수를 환산하며 이화여대 등은 표준점수를 쓰지 않고 백분위를 사용한다.

교육인적자원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주요 대학들은 보완책을 다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

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는 원은 표준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간법(interpolation)'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선택과목별로 원점수 분포(0~50점)가 있으면, 모든 과목 분포의 양 끝점(0점, 50점)과 중간 구간(4%, 50%, 96%) 등 5개 분포 구간을 매듭짓듯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이 점수를 더욱 왜곡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A과목의 원점수 만점인 50점과 48점 차이(2점)가 보간법을 적용한 다음엔 70점과 65점 차이(5점)로 더 벌어진 것이다. 동점자도 더 생겨났다. 골치 아픈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차선택으로 현행 표준점수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 시험관리 강화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때 수험생들이 풀어야 할 선택과목 순서를 정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과학탐구에서 '물리 I-화학 I-생물 I-지학 I' 등의 순이다.

수험생이 허위로 다수 과목(최대 4과목)을 선택한 뒤 실제로 필요한 과목(3과목 이하) 풀이에만 집중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30분씩 선택과목을 응시하게 한 뒤 문제지를 걷어가는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교시 시간은 126분(과목당 30분씩 4과목 120분, 문제지 회수 2분씩 세차례 6분)이다.

● 국립대 공익법인화 검토 '학벌주의 종합대책'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벌주의를 극복하고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 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책에서 대학 서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 대학을 설립목적 및 양성인력의 수준에 따라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및 직업기술 교육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이에 맞춰 학문분야 평가제와 재정지원 사업 형태를 손질하기로 했다.

국립대에 대해서는 연합대학 구성과 대학간 통합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 교수·학생·학점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익법인화 등도 신중하게 검토 할 방침이다.

지방대는 지역산업체, 지자체 등과 연계하는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행정·외무고시 합격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20%를 미달하면 그만큼 지방대 출신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분야에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 정부부처 평가 항목에 능력·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추가하고 우수 부처를 포상하며 정무직 및 고위직 공무원 임용시 출신 대학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분야의 경우 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평가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다양한 평가방식으로 능력중심 인사관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산업현장의 개인 업무처리 능력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훈련·자격제도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제(KSS, Korean Skills Standard)도 도입되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기능인을 우대하는 정책도 적극 펴기로 했다.

이밖에 학력차별 금지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추진중인 차별금지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사회적 의식개혁 운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독립 법적기구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 초·

중·고교나 사립대학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분쟁조정법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중 교육인적자원부총리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안을 검토하도록 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께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통과 등 절차를 밟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며 분쟁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 자료조사 등이 어려워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독립기구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초·중등교육 분과위원회와 고등교육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판사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교수 이상 교육전문가, 3급 이상 공무원, 학교법인 임원 등을 일정 수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총리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1차

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가 조정할 사항은 사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건으로 이해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 및 공무상 기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사건 등은 제외된다.

조정은 화해를 알선하는 절차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마무리되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매 사건마다 3명의 조정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안을 작성해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민법상 화해는 강제 집행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와 차이가 있지만 당사자는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 기한을 정해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불이행시 관할 부처에 당사자 징계나 행·재정상 불이익 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최진명 사학지원과장은 “사학분쟁이 증가하

고 있으나 당사자간 입장차가 너무 커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민사소송 등은 시간·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기구화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 대학자료 1년에 한번만

#### 정부 제출

앞으로 대학이 재학생 변동사항 등 각종 통계 자료를 정부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을 연간 1회로 한정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대학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대학의 통계자료 제출 범위와 절차, 보고양식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를 위해 5월 말까지 대학통계 자료 제출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대학들이 요청한 대학별 지필고사 허용 문제에 대해 "지필고사 문제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대학 행정 규제와 관련해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성균관대 등 9개 대학 기획처장들은 지난달 국조실이 마련한 회의에서 대학별 지필고사 허용

방안을 건의했다.

### ● IT분야 대학(원)생 현장실무 교육 지원

IT(정보기술)분야 대학생과 석·박사과정 학생이 산업체·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며 현장 지향적인 IT전문인력으로 양성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IT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04년도 IT분야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온 이 사업은 IT관련학과가 설치돼 있고 IT인턴십 이수자에 대해 학점을 인정할 계획을 가진 4년제 대학(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IT관련학과 3학년 이상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이며 학부생, 석·박사 과정생 1인당 각각 월 30만 원, 월 80만 원, 월 120만 원 내외의 보조금이 각각 연수기관에 지원된다. 또한 해당 대학에는 이와는 별도로 1천만 원까지 사전교육비와 인턴십 부대 운영비도 지원된다.

이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학교는 인턴십 연수기관과 인턴십 협약을 맺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인력양성 포털 사이트(www.ithuman.or.kr)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5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 ● 이공계에 장학금 5백억 지급

올해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1만748명에게 국가장학금 497억 원이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 수학·과학 내신 성적과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과학탐구영역 점수가 우수한 3,162명과 수시 1학기모집에 합격한 713명 등 총 3,875명에게 216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학 중 일정 학업성적을 유지할 경우 졸업 때까지 등록금전액(1인당 연간 557만7천 원)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가운데 수능 수리·과학탐구영역이 모두 1등급인 학생에게 교재구입비 등으로 연 200만 원, 2등급인 학생에게 100만 원을 각각 주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한 수리·과학탐구영역 1등급 학생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선발돼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이공계 장학생 4,599명과 성적미달·휴학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재학생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774명에게도 221억 원을 지급한다. 또 101개 이공계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재학생 1,500명에게 1인당 연간

400만 원씩 총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별 이공계 장학금 지원액(신입생 1인당 연간 기준)은 서울대 528만 원, 연세대 783만 원, 한양대 804만 원, 포항공대 501만 원 등이다.

### ● 교육정책 추진 속도 빨라진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넘는 국회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16대 국회에서 보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일부 개혁 성향의 법안은 힘있는 여당 탄생에 따라 추진 속도가 빨라져 상반기 중 법제화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총선 결과 나타난 여대야소 정국을 맞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부서별로 세부계획 점검에 들어갔

다. 점검 대상은 일단 총선 정국으로 보류됐던 각종 개혁법안과 논란이 일었던 정책 과제들.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한 교육 관련 재·개정 법안은 모두 18개로 이 가운데 고등교육 관련 법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자격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학분쟁조정법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육성법 개정안 등 7개에 이른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 재임용과 관련된 사전 사후 구제 절차 마련과 임시이사를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근거, 법인의 인수합병과 해산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임용탈락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별도의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학분규의 조속하고 합리

적인 해결을 위해 사학분쟁조정법률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 특히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은 국립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보수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5.5%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9월 중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입법 계획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도 대학간 M&A나 한계법인 퇴출,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을 포함한 공익 법인화, 학벌주의 극복 대책 등 그간 논란이 일었던 각종 교육 정책들도 총산 후폭풍의 영향으로 추진 속도가 빨라지거나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총선 결과 나타난 민의에 따라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상반기 중 대학 구조조정이나 한계법인 해산,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등 관련 법안들이 성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